

2. 오바마 행정부의 동북아전략 전망

황 병 덕

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1세기 들어와 동북아에서는 과거 냉전 유산의 잔존에 따른 갈등과 대립, 미·중 패권경쟁,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불안정한 평화공존과 군사적 긴장의 가능성, 일본과 중국의 역내 주도권 경쟁, 중국·대만의 갈등, 역내 도서 영유권 및 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유동성 및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안보환경은 역내 국가들의 군사력 첨단화와 군비증강 추세, 유동성과 불확실성의 증가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면서 협력과 갈등, 공조와 대립의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발생한 미국 금융위기가 세계경제 위기로 파급되면서 미국 경제의 패권적 지위가 흔들리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 등 동북아질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① 평화와 안정, ② 동북아 지역에 대한 경제적 접근, ③ 석유·원자재 및 상품 수송로 확보, ④ 지역패권국가의 등장 방지 등을 전략적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정책은 개입(engagement)과 봉쇄(containment), 협력과 갈등, 대립과 갈등 사이에서 정책적 조합을 지니면서 추진되어 왔다.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입과 협력을 해오는 한편, 중국의 패권국 등장을 견제하고 패권적 질서의 유지·확대 차원에서 한·미와 미·일 군사동맹 강화 및 MD체제 구축 등 갈등과 대립을 축으로 하는 군사안보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경우 쌍무적 동맹관계에서는 비대칭적 상호 의존관계가 특징을 이루고 있는 반면, 경제관계에서는 다자주의 경향에 입각하여 지배보다는 동의를 체계가 주가 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정책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입(engagement)과 군사적 측면에서의 봉쇄(containment)가 결합된 정책(congagement)을 수행해왔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 집권 시에는 개입위주정책이 동북아전략의 기본축이 되었던 반면, 공화당 집권 시에는 봉쇄위주정책이 전략적 수단이 되었다.

미국 동북아전략의 핵심 대상으로서 대중정책은 부시 행정부에서는 군사적 측면의 봉쇄가 경제적 측면의 개입(engagement) 보다 우세한 실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에서는 미래의 중국 도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은 지정학적 전략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하고, 세계적 차원의 모든 미군배치 및 군사동맹은 중국을 봉쇄하거나 견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재조정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2010년까지 미 해군은 핵공격 잠수함 18척을 비롯한 잠수함 전력의 60%를 태평양에 배치하고, 항공모함 11척 중 적어도 6척 이상을 태평양에 배치하는 등 태평양 해군전력 증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전력 증강에 맞서 미·일동맹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 자위대와 미국 군사력 간의 지휘·통제 체계의 통합적 운용체제를 구축하였다.

부시 행정부와 달리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동북아지역에서 일본보다는 중국을 중시하고, 중국을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constructive strategic partner)'로서 역내 지역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세계적 세력(global power)'으로 인식함으로써 미국의 동북아전략을 미·일관계 보다는 미·중관계 중심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정책은 미·일동맹을 기본으로 하는 군사적 봉쇄를

기본으로 하되, 정치·경제·환경·안보 등에 관한 국제사안에서 중국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부상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MD 체제구축 지속, 해·공군 주력전력의 태평양 이동 등 미국의 대중 군사적 견제는 지속될 것이다. 특히 티베트 분리운동 탄압 등 중국인권 문제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와 달리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가증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수단, 미얀마, 이란, 짐바브웨 등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 중국이 지원하지 않도록 외교적 각종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본적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대만문제는 물론, 한반도문제에서도 현상유지 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일방적인 병합 등의 현상타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북아지역에 미군의 전진배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서도 오바마 행정부는 현상유지정책을 구사, 부시 행정부 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북한 핵문제가 역내질서의 현상변화로 진화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개입정책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 역내안정 유지 목적으로 물리적 개입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적 차원에서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주창하였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자국산업 및 미국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중국, 일본, 한국 등에게 지적소유권 침해, 환율조작, 과도한 무역흑자 등의 불공정 행위는 물론, 수출식품 안전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부시 행정부에서 한국과 체결된 FTA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 일본 등이 국제경제적으로 보다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IMF 개혁 등 세계통화질서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주도권 상실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립보다는 협력을 축으로 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동북아전략은 다음과 같은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2007년 IMF PPP(구매력지수)에 따른 GDP 통계를 볼 때, 미국(13조5433억 달러) 1위, 중국(11조6063억 달러) 2위로 빠르면 2010년경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1890년대 이후 세계최대 국력을 차지하고 한 번도 다른 국가의 도전을 허락하지 않았던 미국이 향후 중국에게 세계 1위 경제대국 자리를 내준다는 가정은 동북아 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말해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더욱이 현재 진행 중인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축을 가져오고, 중국 위안화의 등장을 가져오는 등 동북아질서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 4년 기간 동안 미·중간 국력의 변화에 따른 세력전이가 급격하게 일어나서 동북아에서의 일초다극의 세력균형체제가 파괴되고, 미·중 양극체제, 또는 다극체제 등의 국제질서가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동북아 질서 변화의 도전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4년 동안 중국이 평화적으로 부상하면 동북아의 양극 질서를 용인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패권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만일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의 패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을 강력 견제한다면 동북아에서는 역내 불안정은 물론, 군사적 갈등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 경우 한반도는 미·중 패권갈등 여파로 상당한 정도의 안보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개입위주정책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협력적 양극체제로 발전시킨다면, 미국 내부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개입위주정책이 중국의 지역패권을 용인한다는 소위 「중국위협론」이 확산되어 오바마 행정부의 동북아전략은 미국보수층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